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9
----------	------

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송갑석·인재근·민형배
김원이·박 정·김경만
전용기·이용빈·신정훈
정춘숙·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38개 시·군·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 3,463개의 읍·면·동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의료·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 및 지역의 사회·경제·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제21조의4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 및 지역의 사회·경제·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중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를 “자립적 발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제21조의4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① 국가는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을 위한 적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국가는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 및 지역의 사회·경제·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u>자립적 발전을 위하여</u>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u>자립적 발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u> ----- -----.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2에 따른 <u>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u>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 ----- ----- <u>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제21조의4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평</u>

② ~ ④ (생 략)

<신 설>

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① 국가는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을 위한 적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가는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